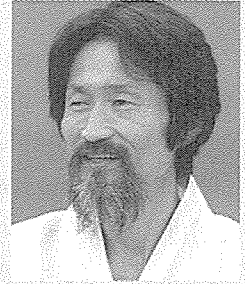


한미 FTA 협상 어떻게 볼 것인가?

- 1차 협상을 마치고 -

강 기 갑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1. 시작하며

지금까지 우리 농민들은 농업을 천직으로 여기며 수지가 맞진 맞지않건 농사를 지어왔다. 농사란 다른 업과 달리 짓고 싶다고 금방 시작하고 그만 두고 싶다고 금방 손을 놓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현 정부와 정치권은 평생을 농사꾼으로 살아온 우리 농민들을 이제 어쩔 수 없이 농사를 모두들 그만 두라고 강요하고 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아닌가? 한미 FTA가 어디 농업만의 문제인가? 미국은 의료, 교육, 금융, 제조업, 각종 서비스 분야까지, 더 나아가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까지 발목을 잡고 뒤흔들 위력적 내용으로 몰아 부치고 있다. 그 중 최대의 피해 산업이 농업이요, 농업중에도 축산, 그중에도 낙농과 한육우 농가들의 피해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할 것이다.

이미 쇠고기를 내어주고 쌀만큼은 지키겠다고 큰 소리 치지만 미국의 입장은 단호하다. 쇠고기는 BSE 위험물질인 뼈를 포함하여 조건없는 수입을 확대하라고 공세를 취하고 있고 쌀 역시 전면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꼴을 보면 설령 쌀을 겨우 지킨다 하더라도 그 이외의 희생제물이 될 다른 품목들도 생각하면 이절할 뿐이다. 미국의 이러한 무차별적 공격성 FTA는 지금 세계 각국에서 거부의 움직임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한국만이 이렇게 초고속 줄속으로 호들갑을 떨며 미국앞에 쫓

쫓매는 것을 보면 이 정권이 쫓대가 있는지 의심스럽기만 하다. 농업 중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 부분에 관하여 그 문제점과 우리 축산인들의 대응에 관하여 정리해 보고자 한다.

2. BSE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내주고 시작한 굴욕적 한미 FTA 협상

정부는 지난 6월 7일로 예정되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다음 달로 연기했다. 미국 현지 도축장에 대한 위생점검 결과, 미국 산 쇠고기와 다른 나라의 쇠고기가 구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리되거나 30개월 이상과 이하의 소를 처리하는데 있어 같은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 등의 문제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태식 주미 한국대사와 박홍수 농림부장관 등 정부의 고위 관료들은 이러한 문제들이 "위생 기준의 문제 등 본질적인 게 아닌 주변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한 달 내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BSE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가 드디어 7월부터 수입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한미 FTA 추진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던 한미 쇠고기 협상은 지난 1월 9일부터 13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양국은 2003년 12월 24

일 미국에 BSE가 발생함에 따라 2년간 중단되었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재개하기로 합의하였다. 정부는 뼈를 제거한 30개월 미만 나이 소의 살코기만 수입하기로 하였기에 안전성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BSE는 아직까지 발병 원인체 또는 발병 기전이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지만 소와 같은 반추동물(되새김동물)로 만든 사료를 반추동물이 먹었을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인간에게도 감염되며 감염시 100%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심각한 질병이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의 BSE 소에 대한 사료정책이 BSE의 발병을 막을 수 없는 정책이라는데 있다.

BSE의 발병원인이 되는 사료정책에 있어 미국은 반추동물의 육골분을 반추동물에게만 금지할 뿐 닭이나 돼지에게는 급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정책은 이미 영국이 시행하였다가 BSE의 발병을 막지 못한 실패한 정책이다. 소의 육골분 사료를 먹은 닭이나 돼지를 다시 사료로 만들고 이를 다시 소에게 급여하는 교차오염을 막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BSE 감염소를 찾아내기 위한 예찰시스템에 있어서도 EU나 일본이 거의 모든 도축소에 대해 BSE 검사를 하는 데 비해 미국은 전체 도축소의 1% 수준에 대해서만 검사를 하고 있다. 게다가 수입중단 조치를 내린 일본이나 홍콩의 사례에서도 잘 나타났듯이 미국의 도축시설들이 국가간에 합의한 수입위생조건조차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월 24일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던 쇠고기에 BSE 위험물질인 등뼈가 포함된 사실을 적발하고 수입중단 조치를 내렸고, 홍콩 역시 3월 11일 등뼈가 포함되어 부분 수입중단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3월 13일 세 번째 BSE 감염소가 발생됨으로서 미국도 EU나 일본처럼 전

수검사를 한다면 아마 BSE 감염소가 다량 발견될 것이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98년 4월 이전에 출생한 소에서 BSE가 발생한다면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수입을 재개한다'는 졸속적인 한미 협상결과를 근거로 비과학적인 치아감별법까지 동원했는가 하면, 미국 미친소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 미국까지 조사단을 보내는 헛프닝을 벌이기까지 했다.

또한 미국의 BSE 검사 및 방역시스템에 허점이 있다는 것이 미국 내 의회, 농무부 감사관실의 보고서(2004.8.18 미 농무부 감사관 보고서, 2005.2.25 미 의회 회계감사원 보고서, 2005.8.12 미 식품안전청 보고서, 2006.2.1 미 농무부 감사관 보고서)를 통해 계속 제기되고 있고, 30개월 미만 소의 살코기가 안전하다는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함에도 정부는 서둘러 수입재개를 결정한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미국 내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미 2년전부터 수시로 보고되었으며, 이를 한국정부도 알고 있었음에도 개선 보완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말만 믿고 수입하기로 약속했다는데 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정부가 한미 FTA를 추진하기 위해 첫째가는 의무마저도 포기했다고 밖에 볼 수 없지 않은가?

3. 한미 FTA 협상과 축산업, 그리고 축산농민

한미 FTA 협상은 '쓰나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국 농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미 FTA 체결시 농업생산은 1조 1,552억원~2조 2,830억원 감소하고, 농산물 수입은 1조 8,353억원~3조 1,719억원 증가하며, 고용은 71,505~142,816명이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지난 5월 17일 한미 FTA 민간대책위원회가 주

최한 토론회에서 고려대 한두봉 교수는 “국책연구기관의 최근 분석은 신뢰도가 낮다”며 “한미 FTA 체결로 쌀까지 포함해 모든 농산물의 관세가 철폐되면 농업소득이 무려 7조7천억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농업총생산액이 36조원인 것에 비춰 본다면 우리 농업의 21% 가량이 고사할 수 있다는 얘기다. FTA 체결 이후 한국농업이 과연 유지될 수 있는지 의문스러운 정도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6월7일 미 하원의원과 공동기자회견

농업전반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지만 특히 전문가들은 미국이 세계 육류 수출 1위기에 축산분야에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품목별 생산 감소액 중 축산물이 3,380억원~9,031억원(14.5% 감소)으로 가장 많은 감소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며, 낙농제품과 축산물의 수입증가율이 각각 157~527%, 91~215%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뿐만 아니라 고용감소 역시 19,569~52,280명으로 축산분야가 가장 많은 피해를 볼 것으로 전망되었다. 쌀과 함께 국가 식량안보의 한 축을 형성하며 국민에게 고단백 영양분을 공급해왔던 축산업마저 위태로운 지경이며, 축산농민의 삶 또한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4. 워싱턴에서 한미 FTA 협상 저지의 희망을 발견하였다

그동안 정부의 통상협상에서 농민들의 요구대로 협상이 중단되거나 협상결과가 무효화 된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한·중마늘협상, 한·칠레 FTA 협상, 쌀 재협상, DDA협상 등 무수히 많은 대외협상 과정에서 농민은 ‘수출증대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

다’는 말에 항상 고개를 숙여야 했고 개방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대외통상협상에 관한한 항상 공허한 반대를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한미 FTA 협상은 시작부터 달랐다.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시민사회단체는 물론이고 학계, 전직 농림부장관, 참여정부의 중요 전직관료들까지 협상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해 나가고 있다. 지난 2월 2일 협상 개시 선언이 있는 직후부터 1차 협상이 막 끝난 지금까지 한국 사회는 한미 FTA를 둘러싼 논란에 휩싸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반대의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과거 협상시에는 협상이 다 끝난 뒤에야 협상내용에 대해 논란이 되었던 것과 사뭇 다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지난 6월 5일부터 9일까지 1차 협상에 대응하기 위해 워싱턴 방문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한미 FTA 반대의 목소리는 이곳 한국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된 것은 큰 수확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이번 워싱턴 방문을 통해 양국

국회, 노동계, 농업계가 ‘한미 FTA가 양국의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대다수 국민을 위한 협상이 아니라 거대 자본과 소수의 기득권층만을 위한 협상’ 이라는데 공통의 인식을 같이 하며, 한미 FTA 반대를 위한 공동의 행동까지 합의한 것은 실로 엄청난 성과가 아닐 수 없다. 정부간의 FTA 협상결과에 대해 비준할 권한을 갖고 있는 미국 민주당 하원 의원 5명과 양국 국회의원들의 공동 성명 등 공동의 행동을 모색하며 9월 워싱턴에서 개최될 한미 FTA 3차 협상에 맞춰 미국 민주당, 대한민국 민주노동당, 양국의 제시민사회단체들과 공동으로 가칭 ‘한미 FTA가 양국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한 토론회’의 공동 개최를 추진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노동계 역시 미국 대표적인 노동운동 조직인 미국노총산별회의, 승리혁신연맹과 한미 FTA를 저지하기로 합의하였으며, 7월 2차협상시 방한하여 공동행동을 전개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농업계 역시 한미 FTA가 양국의 농민과 농업 농촌을 위한 협상이 아니라 다국적 곡물기업의 이윤만을 보장할 뿐이며, 특히 농업개도국인 한국의 농업을 파괴시키는 것은 물론 미국 중소가족농의 피해만을 야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같이 하였으며, 한미 FTA를 저지하기 위해 양국 농민단체들의 공동 연대 투쟁을 전개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7월 2차협상(서울), 9월 3차협상(워싱턴)시 상호방문, 공동집회, 공동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공동으로 전개해 나가며, 양국의 농민들이 처한 실상을 공유하고 향후 양국 농업과 농민의 진정한 협력과 교류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앤써(ANSWER Coalition) 등 미국 내 진보적인 양심세력들과 한미 FTA를 저지하기 위한 공동의 행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지난 2005년 CAFTA(중미자유무역협정,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

스타리카 등 중미 5개국과 미국이 체결)에 대한 미 의회 비준과정에서 민주당의 반대로 단 2표 차이로 비준이 통과되었다는 사실은 고려하고, 1차 협상 당시 방미활동을 통해 미국 내 의회, 노동계, 농업계와의 합의를 염두한다면, 한미 FTA 협상 저지가 실현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잘 말해주고 있다. 지난 2006년 6월 15일 주미 한국대사관 초청 강연회에서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의 데니스 헬핀 전문위원의 발언 역시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거나 적어도 의석을 늘릴 가능성이 커 한미 FTA 비준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다”

5. 1차 협상 결과, 우리가 현실로 드러났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시작부터 잘못된 한미 FTA 협상은 우려와 염려대로 1차 본협상에서도 첫단추를 잘못 끼우고 말았다. 전문가들과 언론의 전반적인 평가는 “이번 1차 협상은 미국에게는 ‘선물’을 한보따리 안겨주면서도 정부는 거의 ‘빈손’으로 돌아온 실패한 협상이었다”라는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협상내용에 대해 우리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첫째, 현지에 법인이나 지점을 설립하지 않고도 금융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국경간 거래를 개방함으로써 정부가 그동안 말해왔던 고용증대는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으며, 금융서비스 강국인 미국에 더 유리하게 되었다.

둘째, 서비스 분야에서 현지에 지점·대행사 없이도 영업을 할 수 있게끔 국경간 서비스를 허용함으로써 현지 고용창출 효과 역시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으며, 소비자 피해 보상도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셋째, 투자분야에서 투자의향 단계부터 국내기업과 동일한 대우를 하기로 했으며, 현지인과 현지부품을 써야하는 의무 부과를 금지키로 하였고,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 절차에 합의하였으며, 국내경제에 교란요인이 될 수 있는 핫머니같은 투기자본마저 투자로 대우받는 길을 열어주었다. 이에 따라 미국기업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소가 가능해졌으며, 미국 기업이 한국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거나 제품에 한국 부품을 일정비율 써야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다.

넷째, 자동차분야에서도 배기량 기준 세계를 미국의 요구를 검토하여 정부는 '부과 기준을 가격이나 연비로 바꾸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중'인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요구는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농업분야에서 긴급세이프가드 조치와 같은 우리측의 중요 요구내용은 미국측의 반대로 협정문에 반영되지 않았다. 원산지 통관분야에서 정부는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줄곧 주장했으나 미국은 이번 협정의 범위는 한·미간이라는 논리와 함께 복핵 등 정치적 걸림돌을 거론하며 외면하였다. 섬유 분야에서 정부는 원산지 기준 완화와 조기 관세 철폐를 요구했지만 미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무역구제분야에서도 한국은 대미수출에 악영향을 준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1983~2005년까지 총 373억달러 부과, 대미총수출액의 7%)를 미국이 남발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주요 쟁점으로 다뤘으나 긍정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다.

정부는 1차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자평하고 있으나 이것이 과연 우리 국민의 요구에 맞추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입장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인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한미 농민단체 대표들, USTR(미국무역대표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

6.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국회에서는 늦긴 했지만 열린우리당 개혁성향의 의원들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의원모임을 결성하고 원내에서부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다. 농촌지역구 의원들 역시 '농어업회생을 위한 국회의원모임'을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농업계내에서는 1993년 UR협상때처럼 범농업계가 총결집하는 비상대책위를 꾸리고 올한해 한미 FTA저지를 위한 사업에 총집중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기 때문이다.

자그마한 희망이라도 보인다면, 돌아 갈 방법이라도 찾겠으나 한미 FTA협상은 이전 다른 협상과는 질적 차원이 다른 협상이기 때문이다. 농업계는 우리 농업에 닥친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가기 위해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그리고 그 힘으로 한미 FTA를 무산시켜야 하며, 우리 스스로 한국농업의 대안을 찾아 희망을 찾아 나아가야 할 때이다. 그 과정에 축산농민들이 단합된 힘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